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벤처 7대 정책과제 발표

- AI 확산, 금융, 기술 보호 등 구조적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
- 권칠승 위원장, “민주당 대선공약 반영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도약” 총력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15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공식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 권 위원장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 및 기술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만큼, 우리 정치가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를 바꾸고 사다리를 놓는 근본적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정책과제가 단순한 민원성 대응을 넘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다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권 위원장은 “오늘 제안드린 7대 정책과제가 당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7대 정책과제 주요내용 >

- 먼저, 전문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와 ‘AI 홀닥터’의 합법화를 핵심 과제로 제안하였다.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기업의 사업 및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 성장 산업*인 리걸테크·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업 시장 진출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변호사·의사 등 기존 전문직역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기반 위에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예상 산업규모 : 법률 AI ('27년, 356억 \$), 의료 AI ('30년, 1,817억 \$)

- 다음으로, 벤처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력의 노동시간 유연화가 제안되었다.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자율·도전·유연성과 그에 따른 보상을 쟁취하는 벤처 정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벤처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규제를 조정하여 산업현장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직 및 일정 지분 보유 근로자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한 완화

-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안되었다. 기술 탈취 가해 기업의 증거 은닉과 입증 책임의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참고하되 우리 기업 환경에 적합한 증거개시 절차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민사소송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증언녹취 등 실효성 있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안심하고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궁극적으로 기술 보호와 투자 활성화로 혁신 기반의 산업 생태계 전반을 견고

히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 디스커버리 제도 : 민사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증거 자료를 강제로 요구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또한, 대기업의 유보자금이 모험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되었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충분하지만 자본과 시장 진출 경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바로 대기업 CVC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펀드별로 외부자금 비중이 40%로 제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투자 유연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운용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부자금 출자비중 기준을 펀드별이 아닌 운용 중인 펀드 전체 합산 기준으로 완화(40%)하여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 보다 유연하고 활발하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CVC의 해외투자 제한 비율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여 대기업의 CVC 신규 진출과 자산운용규모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 은행의 중소기업 상생노력을 계량화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상생금융제도가 함께 제안되었다. 이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투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된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혁신성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미래인재의 성장 기반까지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첨부 1. 중기특위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2. 중기특위 정책제안(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7가지 건의) 끝.